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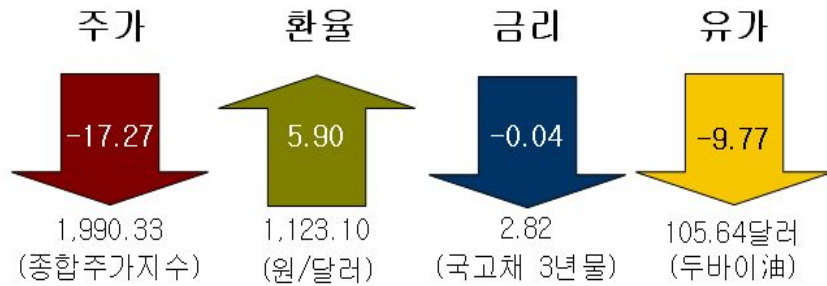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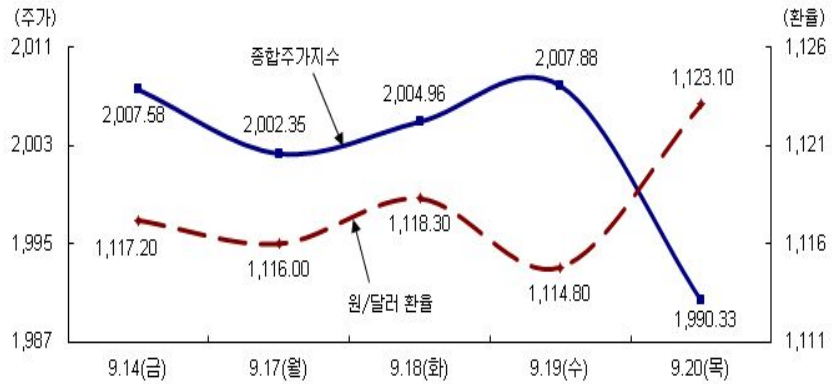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연 7,000명으로 늘려야 생존자 모두 상봉 가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4~9.2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연 7,000명으로 늘려야 생존자 모두 상봉 가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용 화 선임 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연 7,000명으로 늘려야 생존자 모두 상봉 가능

#### ■ 이산가족 상봉 현황

**(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가치 및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위적 사안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의 하나 됨은 물론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당국 차원의 상봉 규모는 연평균 1,8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상봉은 2009~10 년2 차례에 1,770여명만 성사되었고, 2008년과 2011~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편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비용이 점차 증가되어 이산가족 상봉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현황)**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747명으로, 이중 41.0%인 5만 2,744명은 사망했고, 59.0%인 7만 6,003명만 생존해있다. 1985~2011년까지 총 6,125건의 25,272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중 당국 차원에서는 총 4,386건의 2만 1,891명이, 민간 차원에서는 총 1,739건의 3,381명이 상봉하였다.

#### ■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

**(이산가족의 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비교할 때, 특히 80대의 비율이 약 21%p나 증가했다.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 증가)** 2003년 이후 사망률은 매년 평균 2.9%인 반면 상봉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800명에 불과하여, 연간 2,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률은 1.2%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1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봉 기회가 더욱 적어졌다.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현재의 이산가족은 20~24년 후에 모두 사망할 수 있으며, 평균 기대 잔여 수명에 기초한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2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생존자들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매년 6,400명 이상 상봉이 이뤄져야만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다.

####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하여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둘째, 사망률에 비해 상봉률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상봉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셋째,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I. 이산가족 상봉 현황<sup>1)</sup>

○ (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에도 기여

- (단기적 효과)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의 하나 됨은 물론 당국간 대화를 통해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
  -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중단된 당국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할 것임
  - 2009년 추석맞이 이산가족 행사는 2차 핵실험 이후의 경색된 남북 간에 대화와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음
  -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의 된 남북 경색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장기적 효과) 국민적 통합은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이산가족 상봉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족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벤트임
- (전문가 여론)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은 현 정부를 포함해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적
  - 특히,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 정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2012.2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	2012.8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	시급하다	81.9%	이산가족 문제해결	32.1%
	시급하지 않다	18.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시급하다	81.9%	사회·문화 교류 확대	35.7%
	시급하지 않다	18.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31.3%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시급하다	42.3%	문화재·역사 유적 공동 발굴 추진	0.9%
	시급하지 않다	57.7%		

주 : 2012년 2월(72명)과 8월(112명)조사는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1) 금번 보고서는 본 연구원에서 2010년 8월 6일에 발간한 「경제주평」 ‘이산가족 상봉 시급하다’를 수정·보완한 보고서로, 이산가족 상봉 누적 현황 및 상봉률, 사망률, 기대여명변화 등의 최근 현황이 반영되었음

○ (상봉 추이) 2000년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계기로 점차 활성화 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당국 차원) 2000년 이후, 지난 12년간 모두 18차례에 걸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졌으며 총 2만 1,734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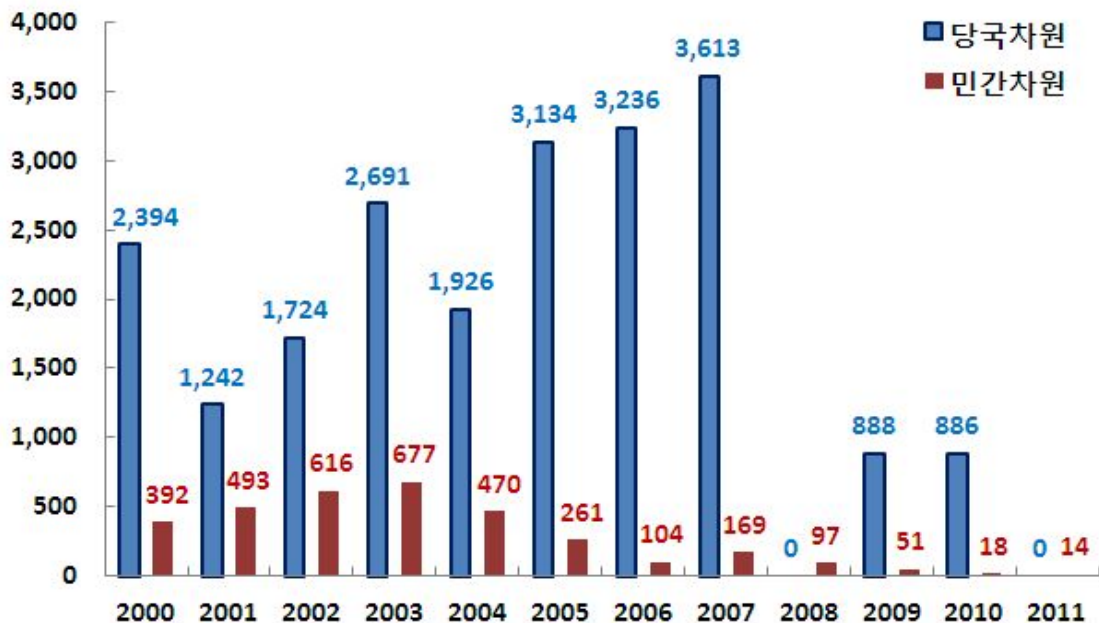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어, 해마다 2~3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2009~10년 2차례에 1,770여명만 성사되었고, 2008년과 2011~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 (민간 차원)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꾸준하게 이뤄져 왔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상봉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14명의 상봉에 그침
- 특히,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도 현저하게 감소함

<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추이 비교 (2000~2011)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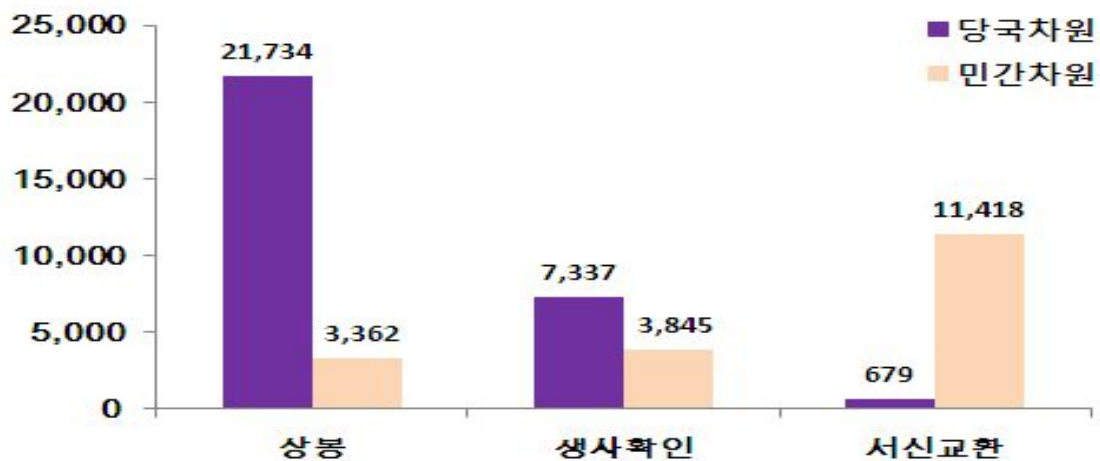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주 : 당국 차원의 상봉자 수는 화상상봉을 포함한 숫자임

- 민간 차원에서는 제3국이라는 상봉 여건의 어려움으로 서신 교환의 형태로 주로 이뤄짐
- 당국 차원에서는 교류 기회가 추첨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주로 서신 교환을 추진해 옴

< 당국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교 (2000~2011) >

(단위: 명)



- 한편 최근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 감소에 따라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비용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
- 특히 2005년 1인당 평균 425만원의 상봉 비용이 2011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35.5%)이 증가
- 상봉 비용 증가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

< 민간 차원 이산가족상봉 소요 비용 (2005~2009) >

(단위: 명 / 만원)

연도	인원(건수)	1인당 평균 상봉 비용	평균 주선 사례비
2005	136명 (84)	425	180
2006	117명 (70)	465	184
2007	96명 (50)	418	174
2008	46명 (32)	539	220
2009	25명 (18)	589	257

자료 : 홍정욱 의원실

주 : 2010년 9월 국회 외교통산통일위원회 보고 내용이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자 2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 (상봉 현황)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왔으며, 당국 차원의 교류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1년까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합쳐 총 4,386건 성사되었으며, 2만 1,891명이 상봉함
  -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65가족, 15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함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면상봉은 총 3,829건(1만 8,143명)이 이뤄졌으며, 화상상봉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총 557건(3,748명)이 성사됨
  - 민간차원의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총 1,739건(3,381명)이 성사되었으며 제3국에서의 상봉(98.0%)이 주로 이뤄졌음
- 당국 차원에서의 상봉 비중이 민간 차원의 상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당국 차원의 상봉은 전체 상봉건수 가운데 71.6%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민간 차원의 상봉은 28.4%를 나타냄
  -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상봉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다가, 특히 북한 가족이 제3국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2005년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화상 상봉은 총 3,748명의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1985~2011) >

구분	당국 차원		민간 차원		합계
	방북상봉	방남상봉	방북상봉	3국 상봉	
대면상봉	3,498건 (15,443명)	331건 (2,700명)	36건 (135명)	1,703건 (3,246명)	5,568건 (21,524명)
화상상봉	557건 (3,748명)		-		557건 (3,748명)
합계	4,386건 (21,891명)		1,739건 (3,381명)		6,125건 (25,272명)
비중(%)	71.6%		28.4%		100%

자료 : 통일부

○ (이산가족 등록 현황)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가운데 59.0%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88년부터 등록을 시작하여 현재까지(2012년 8월 31일)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747명이며, 이중 5만 2,744명(41.0%)이 사망하였고, 7만 6,003명(59.0%)이 생존

< 연령별 이산가족 생존자 및 사망자 현황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생존자(명)	5,714	29,444	25,113	9,361	6,371	76,003
비율(%)	7.5	38.7	33.1	12.3	8.4	100
사망자(명)	22,522	22,524	6,762	780	156	52,744
비율(%)	42.7	42.7	12.8	1.5	0.3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주 : 사망자는 2012년 9월 3일 기준

- 부부나 부모 혹은 자녀 관계에 있는 상봉 신청자가 4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나 자매는 약 41.3%, 3촌 이상은 12.1%를 차지함

< 이산가족 생존자 가족 관계 >

구분	부부/부모/자녀	형제/자매/동생	3촌 이상	계
인원수(명)	35,421	31,366	9,216	76,003
비율(%)	46.6	41.3	12.1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상봉 신청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황해도 출신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평안남도(12.6%), 평안북도(7.9%)의 순으로 나타남
- 출신 지역의 전체 37.1%를 차지하는 기타 지역 출신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월북 가족인 것으로 추정됨

< 이산가족 생존자 출신지역 비율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명)	17,777	9,593	5,978	8,629	2,457	1,975	1,363	28,231	76,003
비율(%)	23.4	12.6	7.9	11.4	3.2	2.6	1.8	37.1	100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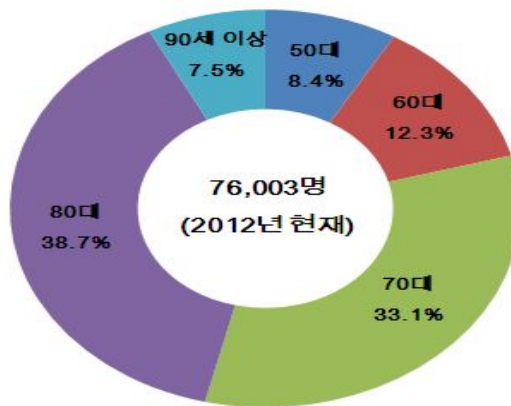


## Ⅱ.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

### 1. 이산가족 고령층 급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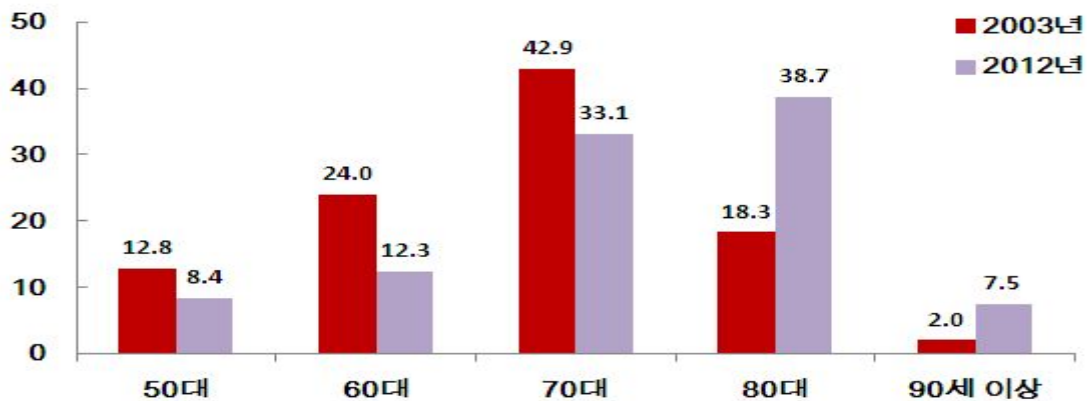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 분포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79.3%를 차지함
  - 연령층별로는 80대(38.7%)와 70대(33.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연령별 분포 >



- 2003년과 비교할 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약 16%p(63.2%→79.3%) 증가하였으며, 특히 80대의 비율이 20.4%p(18.3%→38.7%) 큰 폭으로 증가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고령화 추이 >



## 2.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 증가

-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에 달하며,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000명에 달함
  - 이산가족 사망자의 비율은 증가하나, 상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음
    - 2004년~2011년까지 사망률은 평균 2.9%로 사망자수가 연간 약 3,800명에 이르며,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41.0%에 달함
    - 반면, 이산가족 상봉률은 평균 1.4%로 상봉자는 연간 약 1,800명에 불과하며, 현재까지의 누적 상봉자 비율은 19.6%에 그침
    - 따라서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매년 약 2,000명 발생
  - 특히, 200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정체된 반면, 사망자 누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51명만이 상봉하였고, 2010년에는 추석맞이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을 포함해서 총 904명의 상봉이 이뤄짐
    - 2008년~2012년 8월까지 이산가족의 사망자 비율은 14.7%p 증가한 반면, 상봉자 비율은 1.2%p 증가하는 데 그침

### <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와 상봉 추이 비교 (2003~2012) >

(단위 : 명, %)

연도	사망자 (누계) (A)	생존자 (누계)	합계 (B)	연간 사망자	사망률 (누계)	상봉자		상봉률 (누계)
						연간	누계(C)	
2003년	19,488	103,397	122,885	—	15.9	3,368	10,406	8.5
2004년	23,058	100,861	123,919	3,570	18.6	2,396	12,802	10.3
2005년	26,945	96,268	123,213	3,887	21.9	3,395	16,197	13.1
2006년	28,997	94,933	123,930	2,052	23.4	3,341	19,538	15.8
2007년	33,300	93,487	126,787	4,303	26.3	3,782	23,320	18.4
2008년	38,926	88,417	127,343	5,626	30.6	97	23,417	18.4
2009년	42,123	85,905	128,028	3,197	32.9	939	24,356	19.0
2010년	43,990	84,133	128,123	1,867	34.3	904	25,260	19.7
2011년	49,776	78,892	128,668	5,786	38.7	14	25,274	19.6
2012년 (~8월)	52,744	76,003	128,747	2,968	41.0	1	25,275	19.6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주 : 1) 이산가족의 전체 합계가 변동하는 이유는 미등록자의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임
- 2) 상봉자수는 당국 차원(회상상봉 포함)과 민간 차원의 상봉자를 합한 수치임
- 3) 사망률(누계) = 연도별 사망자 누계(A) ÷ 합계(B) × 100
- 4) 상봉률(누계) = 연도별 상봉자 누계(C) ÷ 합계(B) × 100

### 3.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 현재의 이산가족은 사망률과 평균기대여명으로 보아 약 20~24년이면 모두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2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전망

- (평균사망률)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800명으로, 생존자 7만 6,003명은 약 20년이 지나면 모두 사망하게 될 전망

· 이산가족의 연도별 사망률이 2.9%이고 현재 생존율 59.0%를 감안하면, 향후 20년이 지나면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기대여명) 현재 이산가족은 모두 50~60대 이상으로, 이들의 기대잔여수명이 24.0년임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은 24년 이후에 사망 예상

·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기대여명은 50대가 28.3년, 60대는 19.7년이며, 70대는 12.2년, 80대는 6.6년임

· 따라서 50~60대의 평균 기대 여명은 약 24.0년이며, 70~80대는 9.4년임

○ 따라서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6,400명 이상 상봉해야 함

-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79.3%인 점과 70~80대의 평균 기대 여명이 9.4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6,410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함

· (생존자 76,003명 × 고령자 비율 79.3%) / 9.4년 = 6,411.7명

- 한편 50~60대의 경우, 생존자 비율이 20.7%이고 평균 기대 여명이 24.0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655명씩 상봉이 이루어져야 함

· (생존자 76,003명 × 50~60대 비율 20.7%) / 24.0년 = 655.5명

- 따라서 현재의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애 한번이라도 이산가족들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최소한 7,068명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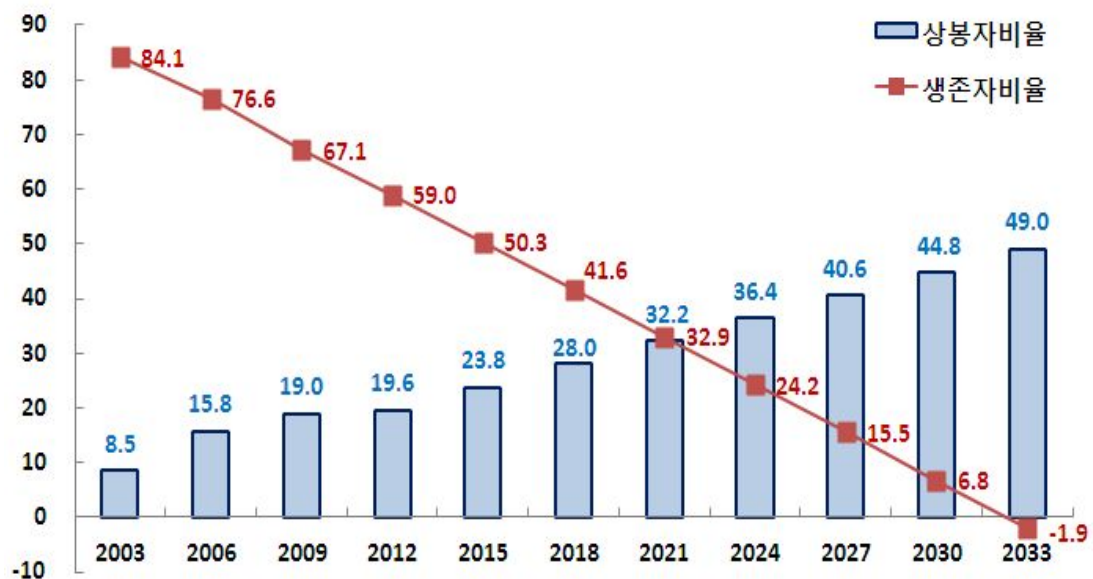
· 50~60대 상봉자 655.5명 + 70세 이상 고령자 6,411.7명 = 7,068명

< 토론 > 이산가족 상봉자 및 생존자 비율 추정

○ 생존율과 상봉률을 기초로 추정한 결과, 2033년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절반 정도가 상봉하지 못한 채 사망할 우려

- 2004년 이후 이산가족의 연평균 생존율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33년경에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상봉 비율은 약 1.4%p씩 증가하여 이산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2033년의 누적 상봉률은 49.0%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봉 규모가 유지될 경우, 약 51.0%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못한 채 사망할 것으로 예상
- 2015년경에는 이산가족 생존자 비율이 5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
  - 2009년 약 67%의 생존자 비율이 올해 안으로 약 59%로 감소하고 2015년의 생존자의 비율은 약 5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연평균 사망자가 3,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2010년 상봉 규모 당국 차원인 886명씩 매년 상봉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됨

< 이산가족 상봉자 및 생존자 비율 추정 >



### Ⅲ.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 (개관)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시급히 처리해야 함
- (명절을 전후한 상봉 추진)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하여 조속히 재개해야 함
  - 대북 수해지원 무산으로 인한 경색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 국면 중에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진 바 있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정책임
    - 이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우선적으로 제의
    - 현 정부는 임기 종료 5개월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전향적으로 추진하여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상봉 추진) 사망자에 비해 상봉자수가 적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봉 인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함
  -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생존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상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연간 7,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추첨 방식의 당국 차원의 상봉을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
  - 또한 북한 현실을 고려할 때 1회 상봉 시 대규모 상봉 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상시 상봉에 대한 남북 간 합의와 이의 제도화 마련이 중요
    -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 간의 정치적 현안에 상관 없이 회담과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

- (화상 상봉 규모 확대)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하여 이산 가족의 상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화상 상봉의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도 대면 상봉보다 행사 준비를 위한 부담이 적으므로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방법일 수 있음
  - 더욱이,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화상 상봉 장소를 확대하는 정책 필요
  
-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 상시화) 직접 상봉의 어려움과 상봉의 장애물들을 고려하여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경색 국면의 현 남북 관계 고려는 물론, 직접 상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라도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생사 확인조차 못한 이산가족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편지 제작 사업 확대가 절실함
  - 한편 기존의 상봉 가족에게도 고령 가족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의 상시화가 필수적임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02-2072-622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3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9월 14일	9월 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87	1.76	-0.11%p
	엔/달러	81.19	80.66	77.66	77.59	78.39	0.80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994	1.3049	0.0055\$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593	13,597	4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159	9,087	-7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86	2.82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17.2	1,123.1	5.9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07.6	1,990.3	-17.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9월 14일	9월 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8.98	92.20	-6.78\$
	Dubai	88.80	106.75	104.89	115.41	105.64	-9.77\$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20.92	306.93	-13.9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